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1년 3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 → ②번) -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 → 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8074, 보건복지부과 보육기반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2021.3.3.

Ⅱ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3.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수)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 이번 지정된 22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임상연구계획이 제출된 시점에 임상연구 안전관리 확보방안, 표준작업지침서 준수 여부, 필수 인력 교육이수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후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임

○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금년 중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번 지정된 22개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는 당뇨, 골관절염, 흑색종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중

■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부터 향후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 절차 개요

절차	재생 실시 기관 지정	임상연구 계획 승인	임상연구 등 실시 기관 관리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 계획 제출	승인된 임상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임상연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관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임상연구 심위위원회 (심의위 사무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 지정기준 관련 세부적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8079, 보건복지부과 재생의료정책과, 2021.3.3.

Ⅲ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완치 이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 강제휴가 등 종용하지 않아야 -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범정부 점검 계획 수립·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1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11.~3.1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307.7명, 3.4.~3.10.)에 비해 0.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11.~3.1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 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8.0명	17.7명	9.7명	13.0명	61.3명	15.4명	1.7명
60대 이상	70.1명	4.1명	1.9명	2.4명	24.3명	7.3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16. 21시 기준)	357개	56개	46개	40개	79개	17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17.) 총 300만 563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6개소(충남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39건을 검사하여 6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1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010	3,720	8,770	6,330	434	242	766	603
수도권		5,001	3,003	3,897	2,545	289	137	472	357
	서울	2,245	1,494	1,856	1,259	83	41	217	172
	경기	1,468	693	1,259	590	173	80	204	139
	인천	504	358	782	696	33	16	51	46
강원		-	-	362	197	5	4	24	17
충청권		245	182	905	654	46	30	65	56
호남권		194	171	1,000	860	10	7	51	46
경북권		-	-	1,403	1,218	28	23	47	40
경남권		375	169	968	641	51	38	99	79
제주		195	195	235	215	5	3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3월 13일~3월 14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81만 건, 비수도권 3,390만 건, 전국은 6,77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8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5.8%(20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6일~3월 7일) 대비 2.8%(91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1%(42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6일 ~ 3월 7일) 대비 11.2%(341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9~11.15)	…	12주차 (2.1~2.7)	13주차 (2.8~2.14)	14주차 (2.15~2.21)	15주차 (2.22~2.28)	16주차 (3.1~3.7)	17주차 (3.8~3.14)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2,911만 건	2,726만 건	3,195만 건	3,497만 건	3,290만 건	3,381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3%	▲6.3%	17.2%	9.4%	▲5.9%	2.8%
	비수도권	3,814만 건	-	2,837만 건	3,253만 건	3,239만 건	3,755만 건	3,049만 건	3,390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4%	14.6%	▲0.4%	15.9%	▲18.8%	11.2%

3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1〉 일상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방지

■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

○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및 제209조제5항·제6항(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 권유) 및 제69조(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지원 금액)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2〉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가 3회 이상 전문적인 상담 제공

○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격리해제 후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 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3.17)하였다.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예방접종 총정리,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제대로 이해하기 등 12개 콘텐츠

-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 무료상담(1인 3회 이내 - 8만 원 상당) 지원 및 검진기관 정보 제공

-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3.8~3.14)을 실시하였다.

-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하였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 전파 사례 등을 안내하였다.

-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3.8~3.14)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5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이행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앞으로 2주(3.15~3.28)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5,445개소)과 외국인 고용사업장(6,220개소),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208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3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9개반, 6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3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 증가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138,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경기도 질병정책과 ,2021.3.17.

Ⅳ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누리집 통해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누리집을 3월 22일(월) 개설 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 2년간 시범사업(‘20~‘21)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밀의료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 이 사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단·치료가 제공되는 등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누리집(https://bighug.kdca.go.kr/ igdata)은 범사업 소개, 참여 절차와 혜택, 개인정보 보호 내용 등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

○ 누리집은 희귀질환자 및 일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요 SNS 채널 개설을 통해, 참여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 (SNS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보건복지부(범부처 추진 간사부처)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 실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이번

누리집 구축 및 소통 채널 개설이,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816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질병관리청 바이오빅데이터과, 2021.3.22.

V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

– 보건복지부 올해 5월 중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 제8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통해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방향 공론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3월 26일(금)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8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 빅뱅시대에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활용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최근, 데이터 3법 개정('20.8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20.9월) 등 정책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은 성숙되었으나,

* (4차위 조사, '20.5월) 공익목적 84%, 의료기술개발 활용 87%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 낮은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여전히 성과 창출의 제약이 되고 있어,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쟁점 파악과 대안마련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 이에, 지난 해 12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현장 전문가 작업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

터·인공지능 혁신전략(안)을 마련하고,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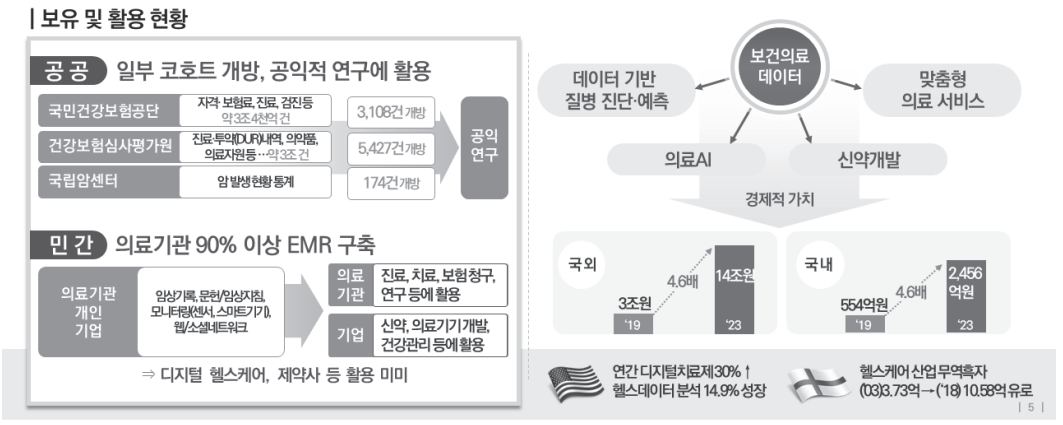
■ 보건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안)(이하 혁신전략(안))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실장은 발제한 혁신전략(안)에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실태 진단 및 글로벌 동향 분석, 비전과 전략,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었다.

○ (활용실태) 공공, 민간 모두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최대 2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코호트 개방 및 공익적 연구에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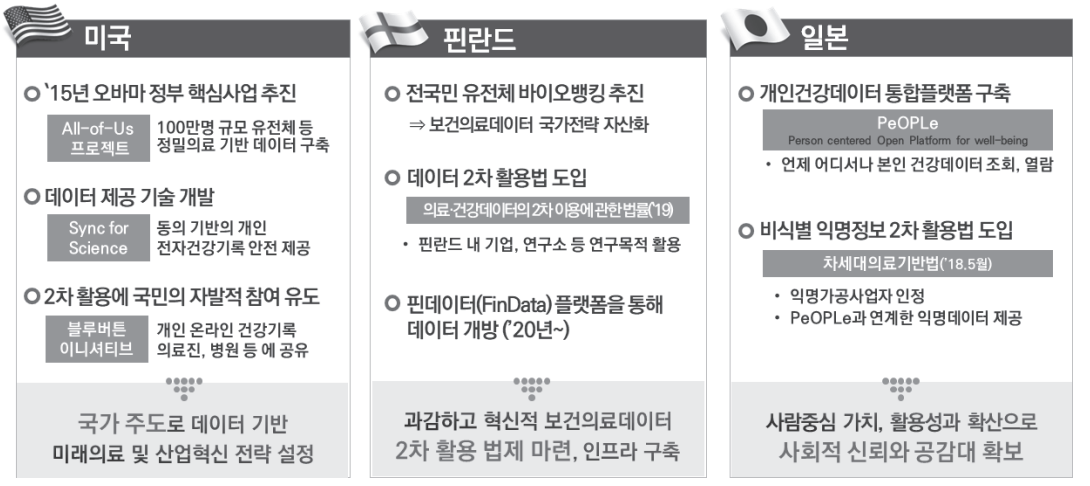
- 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으로는 ①폐쇄·독점적인 활용 문화·행태, ②쓸만한 데이터 부족, 불신과 보상·거버넌스 미흡으로 인한 ③막힌 데이터 흐름을 꼽았다.

〈 보건의료 데이터 현황 및 가치 〉



○ (글로벌 동향)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가 주도 전략 수립, 독자적 법제 마련,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



○ (비전, 전략) 공공은 데이터 활용의 마중물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고,

○ (핵심과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산-집적-활용 全 주기에 이르는 3대 핵심분야와 추진기반(인프라)분야에서 11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였다.

〈 분야별 핵심과제 〉

■ 두 번째 발제로 건양대학교 김종엽 교수가 의료인공지능 활성화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혁신전략(안)의 핵심과제인 병원 임상데이터의 체계적인 중개·분양과 의료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의료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이 어려운 원인 진단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높은 병원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고,

* CT 130만 건, PET-CT 120만 건, MRI 70만 건 등

○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 공유·활용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어졌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각 계가 참여하는 토론 등 사회적 논의을 거쳐 중장기 전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오는 5월 중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늘 행사에 영상축사를 보내 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은 "과거 보호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증진과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보호와 활용 균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 "더 늦기 전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국가 전략 아래 빅데이터 구축과 혁신적 활용생태계 조성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 의료의 관건"이 될 것이며,

○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국가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819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1.3.26.